국내 최대 수소이송용기 실증 착수

전국 유일 탄소복합재 적용
전북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탄소섬유.수소산업의 핵심 융합사업 중 하나인 고압 대용량의 수소이송용기 제조 및 안정성에 대한 실증을 일진하이솔루스(주) 연구센터(전북 완주소재)에서 지난달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탄소복합재를 적용, 수소용 용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전북도는 지난 7월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실증착수를 위해 신제품의 설계와 연구개발을 통해 실증제품을 완성했다.

그간 수소이송용기 시장에서는 금속재의 대체재로 강도가 높고 가벼운 탄소복합재로 전환에 대하여 많은 요구가 있었으나, 현행 기준에서는 경제성을 고려한 고압(450기압 이상)의 용기를 제조할 수 없었다.

이에 전북도 '탄소융복산업 특구'는 이미 500기압 수소용기를 상용화 하고 있는 해외(미국, 일본 등)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한 525기압 수소용기를 연구개발했고, 이번 실증을 통해 규제를 해소,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으로 525기압급 수소튜브트레일러가 상용화되면, 수소이송트레일러의 소형·경량화에 따라, 서울 등 도심지 진입 문제가 해결돼 향후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민의 수소에너지 이용편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와 특구사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대조건에 따라, 업계, 학계,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전문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기준안을 수립('21년 1월)하는 한편,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2021년 9월까지 특구사업자 모두 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

도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실증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실증은 전북도 주력산업인 탄소와 수소를 융합한 신산업 유형으로, 국내 수소산업 시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규제 완화가 이어진다면, 수소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내 탄소소재산업과 연계한 견실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병순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융복합 제품의 상용화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 하는 것으로 관련 산업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유통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입증, 최종적으로 관련 기준 개정과 함께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도록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3차례 걸쳐 방역조치 완화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 주요 내용

일부 고위험시설 접종증명 도입으로 방역 제한조치 해제

사적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총 12명까지 가능

전북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계적 거리두기 완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안은 3차례에 걸쳐 다중이용시설(생업시설)→대규모 행사→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1일부터 6주(운영기간 4주+평가기간 2주)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전환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 중증화율, 사망률 등 유행상황 안정여부 판단 후에 다음 차례 개편 이행을 결정한다.

기존 4단계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해 동일한 기준으로 1차 개편안을 시행한다.

1차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개편 때마다 제한을 해제해 궁극적으로 3차 개편은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이 가능하며,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려는 경우, 중대본 협의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1차 개편에서 대부분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하면서 방역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1차 개편에서 유흥시설 등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완화; 학원은 수능시험 이후 22일부터 해제한다.

▲행사·집회

1차 개편 시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미접종자(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미접종 등 예외대상자)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한다.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1차 개편부터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총 12명까지 가능하며, 연말연시 모임수요를 고려해 제한을 유지한 후, 3차 개편시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워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까지로 제한한다.

▲감염 취약시설

이용자 특성상 감염시 사망위험이 높은 감염 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만 보호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기관, 요양병원·요양시설등은 면회시간 제한 및 접종자만 면회·방문 허용, 미접종 직원 및 간병인력은 주1회 PCR검사 의무화; 미접종환자 1·2인실 배정, 신규 입원환자는 선제적 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종교활동

1차 개편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 포함 시 좌석수의 50%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소모임, 취식, 통성기도 등 감염위험이 큰 위험행위는 2차 개편에서 완화를 검토하며, 문의가 많은 수련회 등은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유호상 기자

박윤정 전주시의원 "시민 주도 생활권계획 수립 필요"

전주시의회 박윤정(비례대표)는 지난달 28일 전주중부비전센터에서 열린 '전주시 생활권계획 수립 준비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개적인 전주시 생활권 계획 참여단 모집 등 시민주도의 생활권계획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권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간극을 줄이는 중간단계 계획이며, 행정·전문가의 협력과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도시계획이다.

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전주시 생활권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수립 방향을 주제로, 박정원 도시계획협의회 위원장은 '도시계획과 생활계획'을, 장우연 전주시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전주시 생활권계획 필요성 및 과제'를 주제 발표했고, 이어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를 통해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전주시 생활권계획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함께 하는 전주시 생활권계획 참여단 구성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선진적인 전주시 생활권계획을 통해 지속발전가능한 도시 전주를 구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난달 29일 전주 남부시장을 찾은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남부시장 번영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남부시장 내 무허가 건물 양성화 절실'

조지훈 전 경진원장, 남부시장 번영회 만나 간담회

"역사적 가치가 큰 남부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젊은 상인들이 더욱 유입돼야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 대다수라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태생적인 문제인 만큼 행정에서 적극 나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달 29일 전주남부시장 상인들이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에게 남부시장의 현안을 전하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전주를 땀으로 적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네 번째 행보에 따른 것으로, 조 전 원장은 이날 전주남부시장을 방문해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사)남부시장 번영회(회장 하현수)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하현수 회장을 비롯해 번영회 임원과 청년몰 입주 상인 등 10여 명이 참석, 조 전 원장은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남부시장의 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하 회장은 "전주시의원과 시의장, 경진원장을 거치면서 남부시장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애써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남부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다양한 먹거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요식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점이 거의 없다. 이 역시 무허가 건물임에 따른 것으로, 이를 양성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통 편의를 높여야 하는데 현재 교통 체계로는 어려운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하며, 현재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새벽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전 원장은 "남부시장은 역사적 가치가 크고 전국적으로 성공사례인 청년몰 등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주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남부시장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남부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힘들어진 상인들을 위로하며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조 전 원장은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주요 공약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속적으로 전주 구석구석을 누빌 계획으로, 오는 4일에는 전주모래내시장을 방문한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중국사무소 한민족 문화제 참여

전북도중국사무소(소장 이지형, 이하 중국사무소)가 중국 상해 한국상회에서 주최하는 '제16회 한민족 문화제'에 전북도 홍보관을 운영했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상하이(上海)시 친황다오루 32호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 중국사무소는 전북도 관광총괄과와 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한지등(燈), 한지풍경 등의 체험과 태극선을 나눠주며, 전북도의 한국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특히,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홍보를 위해 대회 마스코트인 '아치&태치'가 인쇄된 마스크를 배포해 행사장에서 최고 인기를 누렸다.

이번 홍보관 운영에는 상하이에 유학 중인 전북도 유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도와줘 더욱 의미를 더했다.

주최 측은 최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복장으로 이목을 집중시켰고, 행사장 일대에서는 조선시대 왕가의 전통복식 행진을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감탄을 자아냈다.

이지형 중국사무소장은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대면 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전북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조건부 수당' 된 농업인 공익직불제, 개편 필요

윤준병 의원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편 보장해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 개정 법안'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지난달 29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직접지불금 대상 농지의 요건에서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는 한편,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법률에서 240만 원으로 명시함으로써, 공익직불제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최근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가 21대 국회 등원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비롯해 '농민 기본소득, 농업인 기초연금' 등이 제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에선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공익직불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지급대상의 자격조건에 매몰돼 버린 주객이 전도된 형국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직불금의 대농 집중 문제를 개선하고, 농촌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시행하면서 소농직불금을 도입했지만,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극화 해소는 요원하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월 10만 원 수준인 현재 소농직불금을 2배 이상 획기적으로 인상해야 양극화 해소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윤준병 의원은 "현행 '농업농촌공익직불법'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에 여전히 역부족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최우선 조건이 돼야 하며, '공익수당'의 개념에 입각해 제도가 재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환영"

이원택 의원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등 최선"

김제 용지 정착농원이 이르면 오는 11월 3일 새만금특별법상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용암리, 신정리 일원 117만6,746㎡(1,744필지)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김제 용지 정착농원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내년부터 총사업비(국비) 481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돼 김제 용지 일대의 현업축사의 전량 매입과 생태복원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익산 왕궁정착농원과 함께 1960년대 조성된 축산농가 밀집 지역으로, 다양한 축산오염원이 만경강·용암천을 통해 새만금으로 유입되어 왔고, 전북혁신도시 등에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축사 매입사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전북도, 김제시와 함께, 환경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에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고, 사업의 추진 시기와 그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등을 환경부와 협의하며, 이번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되는 쾌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원택 의원은 "김제 용지 정착농원 일대가 이번에 '새만금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송하진 도지사님, 박준배 김제시장님을 비롯한 전북도와 김제시 관계 공무원, 윤준병 의원님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 수질 개선과 인근 지역의 악취 해소를 위해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 이번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